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목차	10대 정책 요약
☐ 10대 분야별 정책	
1. 정치 사회주의 개헌 목적 ‘헌법개정국민발안권’ 개헌 저지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국강병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 계승	
2. 통일외교 김정은 정권 교체. 북한민주화 개혁개방 추진. 4.27판문점 선언 및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종북 주사와 세력 척결.	
3. 국방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연합방위체제 강화 유지	
4. 사법윤리 문재인 정권 불법비리 및 사법방해 특검 추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및 탄핵의 위법성 조사	
5. 재정경제 유류세 폐지로 유류비 반값	
6. 노동, 산업자원 최저임금, 탄력근로 노사합의 시 처벌 폐지 법인세 감세 등으로 기업주도 성장 추진 탈원전 정책 철회로 전기요금 인하	
7. 보건복지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 국정조사 실시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충(최저임금 예외 적용)	
8. 교육 전교조의 좌익사상 주입교육 금지 학부모와 교육목표 계약하는 ‘계약학교제’ 실시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9. 건설교통 GTX 건설과 환승센터 및 콤팩트 시티 건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획기적 증대	
10. 문화관광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문화 계승발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강국 육성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순위: 1	사회주의개헌 목적 '헌법개정국민발안권개헌' 저지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국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 계승	정책분야	정치
[사회주의개헌 목적 '헌법개정국민발안권개헌' 저지] ☐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법제처 심사요청안) 공개: 자유를 뺀 통일, 토지공개념 등 포함 ○ 2018년 3월 3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위원회 구성(위원장 김문수, 이재오, 김무성): 사회주의개헌 저지 ○ 2020년 2월 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총선 후 토지공개념 동일임금 개헌 논의 필요성 언급. 과거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중국식 토지국유화 지지 발언 ○ 2020년 2월 11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개헌추진위 발족.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개헌 추진. ○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개헌은 촛불선동정치의 일상화를 통한 2단계 사회주의 개헌 추진이 목적 ☐ 목 표 ○ 사회주의개헌 목적 달성을 위해 일상적으로 촛불선동정치를 통해 개헌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단계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개헌부터 저지 ○ '자유'를 뺀 통일,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고, 개헌 후의 연방제 통일 추진도 저지 ☐ 이행방법 ○ 4.15총선 '사회주의개헌 목적 헌법개정국민발안권 개헌 저지선 구축을 위한 후보단일화' 추진 ☐ 이행기간 ○ 21대 국회 전 기간(100~200명으로 사회주의 개헌반대 의원 모임 구성)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사업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순위: 1	(앞에서 계속)	정책분야	정치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국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 계승]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입국 산업화 부국정신에 입각해 세계 10위권 나라로 우뚝 섰 - 이 두 분의 건국과 부국의 공에도 불구하고 좌익 종북주사파 세력은 장기집권의 과(過)를 침소봉대하여 ‘이 나라가 기회주의가 득세해오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태어났다’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음 - 오히려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는 세습독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압살하고 있는 북한임 ○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부국대통령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꽃피는 나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음 - 민주화세력으로 위장한 종북주사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대한민국의 과실을 향유하면서도 북한의 3대세습 독재를 옹호하고 이승만 박정희의 업적을 폄하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음 ☐ 목 표 ○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한 이승만, 박정희대통령의 건국, 부국강병 정신을 선양하고, 자유통일을 이루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대한민국의 건국, 부국강병, 자유통일 노력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르쳐야 함 ☐ 이행방법 ○ 건국대통령 이승만, 부국강병대통령 박정희의 정신, 자유통일 대통령 박근혜의 정신을 선양 ○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건국 및 부국, 자유통일의 역사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확립 ☐ 이행기간 ○ 즉시,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별첨자료인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참조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순위: 2	김정은 정권 교체. 북한민주화 개혁개방 추진 4.27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	정책분야	통일외교
□ 현황 및 문제점 ○ 3대세습독재 김정은정권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를 불안에 빠트리고 있고, 북한 주민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자신의 고모부를 총살시키고 친형을 독살하는 등 극악무도한 공포정치를 실시 ○ 종북주사파 세력은 시장봉사자인 기업가를 착취자로 보고 있으며, 기업단위 노조를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의 수단이 아닌 전국단위 연합의 정치투쟁 수단으로 삼고 있고, 북한을 추종하며 북한정권의 세습독재 반인권 반자유에는 침묵하면서 허위사실에 입각해 탄핵을 이끌어냈으며,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에 근거하여 언론 문화예술계 등을 장악해 진실을 조작 □ 목 표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김정은과 종북세력이 주적임을 선포하고, 북한민주화와 종북세력 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 종북주사파를 척결하여 토지공개념 등 자유시장 봉사경제를 사회주의 약탈경제로 대체하려는 시도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에서 '자유'를 빼려는 음모를 저지 □ 이행방법 ○ 국방백서에 주적 명시, 4.27판문점 선언 및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국방과피행위 원상복구 ○ '자유민주주의 수호법'을 제정하여, 각급 기관 조직 기업들도 자신과 관련된 경우 법률에 근거해서 사회주의 약탈선동자들의 조직파괴, 기업파괴, 국가파괴 행위에 대해 징계, 고용계약 해지, 형사고발 등 다양한 자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사업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순위: 3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정책분야	국방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8개 군단·39개 사단' 체제를 2025년 '6개 군단·33개 사단 체제'로 바꾸는 식으로, 전방 2개 군단, 6개 사단 해체 ○ 주적 표현 금지 ○ 문재인 정권은 전쟁억지력 차원에서 만들어진 DMZ GP철거, 철원 지뢰제거, 탱크 방어벽 철거, 한강 수로 공동조사, 한강 하류 철조망 철거, 20km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안보환경을 날로 악화시키고 있다. ○ 드론을 활용한 군사작전 등 군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드론의 위력은 미국이 본토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인 쿠드스군 사령관이 탄 차를 이라크에서 핀셋처럼 집어내어 공격한 것에서도 위력을 잘 알 수 있다. ☐ 목 표 ○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 이행방법 ○ F35, 싸드 도입 등 신무기 획득 사업 계속 진행 ○ 기계화 사단 육성 ○ 드론 등 신무기 활용 ☐ 이행기간 ○ 즉시,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별첨자료인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참조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순위: 3	(앞에서 계속)	정책분야	국방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제경제체제 편입으로 부강해진 중국은 국진민퇴(國進民退), 일대일로(一帶一路), 제1 제2 도련선(島鏈線) 설정 등 사회주의적 제국주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음 ○ 미국이 인도양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이에 맞섬에 따라 국제질서가 미-중간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 -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참가를 거부하고 있음 - 바다는 교역과 개방과 번영을 가져온 장소로서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 - 걸프지역 페르시아만에서 석유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대양해군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에 필수적 ○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 파기를 획책하는 등 동북아 안보를 저해하려고 한 바 있음. ☐ 목 표 ○ 한미동맹 강화 및 전시작전권 반환 취소 ○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과의 연합안보에 적극 참여 ☐ 이행방법 ○ 문재인 정권의 친중반미노선 반대: 일대일로 참여·북한을 경유한 러시아 송유관 부설 및 철도연결 계획 등 반대 ○ 인도양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참여 결의안 및 한미일 삼각 안보 경제협력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 이행기간 ○ 즉시,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사업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순위: 4	문재인 정권 불법비리 및 사법방해 특검 추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탄핵의 위법성 조사	정책분야	사법윤리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권했지만, 그간의 행적을 보면 항상 ‘내’ 사람이 먼저였고, ‘북한 김정은’이 먼저였고, ‘중국’ 사람이 먼저였음 ○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부정, 우리들병원 대출, 유재수 감찰 등 ‘3대 게이트’ 사건의 관련자들을 불법적으로 비호하고, 조국 사건의 경우에서도 사법방해행위를 남발함 -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관련자 수사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피의자들에게 공천을 주어 선거에 출마시키려 하고 있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검사들을 인사 학살하는 등 구조적 사법방해행위 - 민변 등 친위세력을 투입해 계슈타포를 만들 것으로 의심되는 ‘공수처법’을 강행 통과 ○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많은 절차적, 실질적 위법행위가 의심됨			
☐ 목 표 ○ 특검을 도입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 종합세트를 철저하게 수사 ○ 문재인 정권의 사법방해행위 조사 처벌. 또한 죄형프레임주의로 약탈주의 좌익무죄, 봉사주의 우익유죄를 만든 문재인 정권 죄형법정주의 훼손을 처벌.			
☐ 이행방법 ○ 기존의 상설특검법에 의거하여 문재인 정권 불법비리 및 사법방해 특검 ○ 공수처법 폐지, 추미애 탄핵, 특검 결과에 따라 문재인 탄핵 ○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의 위헌 위법성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사업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순위: 5	유류세 폐지로 유류비 반값	정책분야	재정경제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활동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므로 중소기업인의 경우 차량 운행과 관련한 유류비 부담이 큼(2020년 3월 12일 현재 휘발유 리터당 전국 1,494원 서울 1,578원, 경유 리터당 전국 1,307원 서울 1,404원 - 오피넷)
 - 세금이 종량제로 리터당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주된 경제활동 내지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람의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됨

< 각 유종별 세금의 종류 >

구 분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경유	LPG	비 고	
관 세	3%	3%	3%	-	원유가격의 3%	
수입부과금	16원/L	16원/L	16원/L	-	리터당 16원	
세전 정유사가격						
유류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529원/L	529원/L	375원/L	-	휘발유 : 리터당 529원 경유 : 리터당 375원
	개별소비세	-	-	-	160.6원/L	LPG : 리터당 160.6원
	교육세	79.35원/L	79.35원/L	56.25원/L	24.09원/L	교통세, 개별소비세의 15%
	주행세	137.54원/L	137.54원/L	97.50원/L	-	교통세의 26%
판매부과금		36원/L	-	-	36.37원/L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원 LPG : 리터당 36.37원
품질검사수수료		0.469원/L	0.469원/L	0.469원/L	0.469원/L	석유제품 : 리터당 0.469원
부가가치세		(세전 정유사가격 + 유류세 + 판매부과금 + 유통마진) × 10%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홈페이지, 2017년 10월 21일 기준

출처: <https://md2biz.tistory.com/254>

☐ 목 표

-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중소기업인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폐지

☐ 이행방법

-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모두 폐지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약 연 26조원의 세수 감소는 재량지출 억제, 불요불급 사업 폐지로 해결

별첨 자료: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참조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순위: 6	최저임금 탄력근로 노사합의시 처벌 폐지. 법인세 감세 등으로 기업주도 성장 추진. 탈원전 정책 철폐로 전기요금 인하.	정책분야	노동, 산업자원
☐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을 2018년 16.4% 7,530원/시, 2019년 10.9% 8,350원/시로 급속하게 인상함으로써, 1%의 대기업 12% 종사자를 제외한 99%의 중소기업 88% 종사자들 대부분이 폐업과 실직의 위험에 봉착했고, 하위 1분위 근로소득은 추락 ○ 수출 관련 업종의 경우 주문에 따라, 또 연구 개발업종의 경우 과제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하지 않으면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음 ○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을 (각종 감면 폐지 등으로) 올리면, 산업경쟁력이 현저히 추락할 수밖에 없음 ☐ 목 표 ○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각종 규제 철폐, 사업가 처벌 만능주의 법안 폐기 ○ 경제 및 생활 비용을 증가시키는 탈원전 정책 폐기 ☐ 이행방법 ○ 노사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자율조정 및 탄력근로제 적용 허용 및 처벌 법규 폐지 ○ 탈원전 정책 폐기 국회결의안 통과, 고리 월성 등 원전 사용정지 관련 특검 실시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사업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순위: 7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 국정조사 실시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충	정책분야	보건복지
☐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말에 우한(武漢)에서 발생해 2020년 초부터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은 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2020년 초부터 당분간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여행자 철저 격리를 촉구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이에 반대하였고 확진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 5,000명을 넘자 이제는 너무 많이 퍼져 입국금지가 효과가 없다는 핑계로 또 반대함 - 우한폐렴이라는 말은 특정 지역 비하라며 쓰지 못하게 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구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가 하면, ‘신천지교단’이 원흉인 것처럼 자국민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음 - 마스크 부족사태를 방치하다 최근 배급제를 실시하는 등 국민건강은 뒷전 ○ 연금제도 미비로 고령자의 생계곤란 등 빈곤 문제 심각 ☐ 목 표 ○ 우한폐렴 사태는 ‘외교문제가 아닌 방역의 문제’임에도 중국에 굴종적 자세로 중국인 입국금지를 미 실시해, 전 세계 123개국으로부터 한국인 입국금지를 당하게 방치한 문재인정권의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 문책 ○ 평온한 노년 생활이 되도록 고령자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찾아주기 확대 ☐ 이행방법 ○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우한폐렴 코로나19 대처 관련 국정조사’ 추진 ○ 고령자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및 노인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예외 적용) ☐ 이행기간 ○ 21대 국회에서 입법. ☐ 재원조달방안 등 ○ 별첨 자료: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참조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순위: 8	전교조의 좌익사상 주입교육 금지 학부모와 교육목표 계약하는 '계약학교제' 실시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정책분야	교육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교육은 전교조의 좌익사상 주입교육,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나라들과의 협력에 반대하는 철저한 반일사상 교육으로 병들고 있음(예, 빨치산 유적지 탐방, 인헌고 사태 등) ○ 조희연 교육감 등에 의한 혁신학교 권장, 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폐지는 학부모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 유발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공로자인 군 의무복무자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주고 있는 현실 - 복무형태의 특수성과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해 당장 보수를 늘려주지 못해도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줄 필요 - 컴퓨터 활용 전쟁 양상을 고려할 때, 여성 군복무도 지원시 적극 수용필요 ○ 경제난으로 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자금대출 상환 곤란 ☐ 목 표 ○ 교육 목표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타인에 봉사할 수 있는 재능습득과정으로 명시하고, 상업 재무교육, 인문교육, 실업교육, 과학교육 균형 실시. ○ 신성한 군복무를 장학금 등으로 보상하여 애국과 동시에 실력양성 기회 부여 ☐ 이행방법 ○ 학부모와 학교 당국 간에 교육목표를 계약하는 '계약학교제' 실시 ○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 학자금 대출상환 35세까지 유예 ○ 전교조의 좌익 사상교육 금지, 혁신학교 폐지, 특목고 존치 ☐ 이행기간 ○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별첨 자료인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참조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순위: 9	GTX 건설과 환승센터 및 콤팩트 시티 건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획기적 증대	정책분야	건설교통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민선5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핵심공약(A, B, C노선 총사업비 12조원). 경기도내 역간거리 10Km, 역세권내에 콤팩트 시티를 구상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건설재원을 확보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계획했던 바 있음 (총사업비 12조원 중 민자 6조, 개발이익환수 3조, 중앙정부 2조, 지방 1조.) ○ 이 계획이 신속하게 실행되었다면 2기 신도시가 활성화되었을 것이나, 이 계획의 지연 및 신규 3기 신도시 추진으로 불필요한 민원 유발과 막대한 사업비 추가 소요로 예산 낭비초래 ○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질투 세력에 의한 각종 금융규제 및 세제 규제, 인허가규제 등 봉쇄로 낡은 아파트 방치 문제 ○ 인플레이와 주택공급 제한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 주택가격 급속 상승 - 시장원리에 따른 수요를 무시한 주택정책은 일부 지역 빈집, 일부 지역 높은 가격이라는 정반대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 목표 ○ 교통 기반 국토 건설 추진 ○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 추진 ☐ 이행방법 ○ GTX 신속 건설 및 적정 위치에 환승센터 설치, 연계된 콤팩트 시티 건설 ○ 재개발 재건축 신청에 법적 하자가 없으면 즉시 허용, 각종 금융규제 및 세제 규제·인허가규제 폐지 ○ 신혼부부용 임대 주택 공급 획기적 증대. 원하는 경우 5년 임대후 분양 ☐ 이행기간 ○ 즉시 ○ GTX는 A, B, C 노선 동시 건설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별첨자료인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참조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순위: 10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문화 계승발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강국 육성	정책분야	문화관광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역사와 관련하여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민주국가 일본과의 협력보다는 침략국가 일본제국주의 시절의 기억만 소환하여 반일 분위기가 일변도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조선의 망국화 과정도 단지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인 양 단순화시키고 있다. 나라는 스스로 망하게 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망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선말 및 대한제국 시기를 지나치게 미화해서는 안된다. 세계10위권 나라에 이르게 된 현재의 상태에서는, 반일 기억의 끝없는 재생반복보다는, 개화 이후에 일본은 성장에 성공했는데도, 조선-대한제국은 정체했던 요인들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한민족의 역사 정신문화는 조선시대와 현대 대한민국만 비교해보아도, 지배층에서 착취를 하지 않고, 자유를 보장하는 한 활짝 꽃필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업화 수출입국으로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K-pop, 그 중에서도 BTS 등이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현대사에서 이런 과정을 지우고, 오직 민주화와 노동운동만이 발전요인의 전부인 양 왜곡하고 있다. 문화 발전과정에서 소유권과 자유가 소중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문재인 정권은 상업 경제 발전의 토대 위에서 (전시회, 공연, 콘서트, 프로야구, 프로축구, 관광지 음식문화촌 등) 사람들의 티켓팅 파워에 의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이 발전한다는 인식을 가지기보다는, 관 주도의 지원에 의해서 좌익 위주의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무런 형체가 없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과민반응을 일으킨 것은 이 때문이다.			
☐ 목 표 ○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 문화를 상업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전파. ○ 소유권보장과 자유 위에서 시장 중심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			
☐ 이행방법 ○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등을 통한 한국어 전파, 한류문화 전파 지원 확대 ○ 관주도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켄처테크의 기업화 지원. 기업이 문화예술체육관광을 돕는 메세나(Mecenat) 운동에 세금 감면 확대			
☐ 이행기간 ○ 즉시,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별첨자료인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참조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 별첨 자료	10대 공약 재원조달방안

□ 소요 예산 및 기본방향

○ 우리공화당의 주요 공약 소요예산은 4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정상적인 세입구조 내에서 총선공약 소요재원 조달 가능

□ 재원충당 방안

○ 연도별 예산증가분 활용: 재정수입과 재정지출계획을 감안할 때, 매년 15조~25조의 재정 여력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출성격별로 볼 때 의무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에서 매년 마찬가지로 액수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에, 이를 활용할 때 공약집행을 위한 예산은 별도의 조치 없이도 예상 순증액만으로도 충분하게 조달가능.

※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과감히 줄이고도 총선공약 재원조달 가능

<참고자료>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476.1	476.4	482.0	505.6	529.2	554.5	3.9
(증가율)	(6.5)	(6.5)	(1.2)	(4.9)	(4.7)	(4.8)	
○ 국세수입	294.8	294.8	292.0	304.9	320.5	336.5	3.4
○ 세외수입	26.6	27.0	27.8	28.9	30.1	30.5	3.4
○ 기금수입	154.7	154.7	162.1	171.7	178.5	187.6	4.9

* '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1) 재정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을 합친 규모이며, 예산수입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뉜다.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지출	469.6	475.4	513.5	546.8	575.3	604.0	6.5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328.9	332.6	352.4	373.6	391.2	410.4	5.7
(비중)	70.0	70.0	68.6	68.3	68.0	67.9	
○ 기금지출	140.7	142.8	161.0	173.3	184.1	193.6	8.3
(비중)	30.0	30.0	31.4	31.7	32.0	32.1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239.3	239.8	255.6	270.7	289.5	302.8	6.1
(비중)	(51.0)	(50.4)	(49.8)	(49.5)	(50.3)	(50.1)	
○ 재량지출	230.3	235.6	257.8	276.1	285.8	301.3	6.9
(비중)	(49.0)	(49.6)	(50.2)	(50.5)	(49.7)	(49.9)	

* '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2019).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019.09.03. p.21, 25